

특전사회가 5·18 진상조사 나선다...민간조사위 출범

5월 단체와 ‘특전사 5·18조사 위원회’ 발족
 5·18 잘못 인정하면서 진상규명 협조 약속
 공신력 확보·중복 조사 우려 불식은 아직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가 5·18민주화 운동 일부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함께하는 민간 차원 5·18 조사 기관을 출범하고 자체 5·18 진상규명에 나선다.

특전사회는 2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43년 전 5·18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기 위해 ‘특전사 5·18진상조사 위원회’(특전사조사위)를 출범하고 관련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43년 전 5월 광주가 민주화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당시 신군부 세력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특전사 3개 여단을 광주와 전남에 투입한 사실이 있다”며 “제7공수특전여단은 전남대에서 학생들과 계엄군 사이 발생한 분쟁을 과격할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광주시민들의 항쟁이 격해지면서 신군부는 이를 빌미로 제 3·11공수특전여단을 추가 투입했다”며 “이후

벌어진 많은 상상으로 5·18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했다.

또 “특전사회는 이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체 조사 기관을 출범, 지나간 잘못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려 한다”며 “지역민과 과 특전사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전사회는 5·18 당시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예비역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전사조사위에 책임자와 조사위원 총 13명을 두고 내년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특전사회와 부상자회 등은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어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공동 조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의 초안을 밝힌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와 별도로, 특전사 예비역 사이에 형성된 라포(유대감)를 이용해 5·18 당시의 증언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단체들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특전사 5·18진상조사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있다.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명을 제외해 두 차례 5·18 증언회를 열었으나 새로운 사실 확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전사조사위 출범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국가가 주도하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 강제 조사를 할 권한과 근거가 없다.

또 특전사회 내부에서 자신들의 예비역들을 조사하는 만큼 ‘셀프 면죄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아직 전수조사도 되지 않은 만큼 5·18 조사위가 이미 조사를 마친 특전사 예비역들

을 재차 조사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5·18조사위는 활동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암매장 의혹을 받고 있는 3공수여단 소속 817명 중 360명의 증언을 받고 이중 87명의 유효한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

또 5·18 당시 투입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마쳤다.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도 지난해 8월 29일 두번째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5·18조사위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가칭 5·18 청문회 참석자 명단을 확정, 현재

청문회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최병관 특전사조사위 위원장은 “공신력과 관련,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외한 사실적인 작전내용을 조사해 5월 단체에 공유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조사 방식으로 활영, 녹화를 동시에 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피해자와 특전사회 소속 예비역의 작전 내용이 일치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경우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광주경찰, 전방위 마약 단속 2주 만에 ‘성과’...“적극 신고를”

합동단속추진단 구성 직후 마약사범 11명 송치...4명 구속

마약 범죄 척결에 나선 광주경찰이 전방위 단속 2주 만에 11명을 검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꾸린 이달 12일부터 약 2주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내·외국인 11명을 검거,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유통책 역할을 하거나 상습 투약 혐의가 드러난 4명은 구속, 검찰로 넘겼다.

또 마약 투약·유통 사건 5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자 또는 입건자만 64명에 이른다.

광주경찰은 지난달 1일 전남 목포시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 A(30·여)와 A씨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90만 원 상당)을 구입, 일행과 함께 투약한 베트남인 B(32)씨를 잇따라 검거·구속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마약이 밀반입, 광범위하게 투약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 경찰은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은 또 자택, 차량에 합성대마 143g(2800만 원 상당)을 보관한 베트남인 C(29·여)씨도 검거, 지난 20일 구속했다.

C씨는 이달 3일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28·여·구속)씨로부터 엑스터시 6정(630만 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C씨가 지니고 있던 합성대마는 건조에 환각성 물질을 섞은 것으로 1회 투약량 0.3g을 기준으로 476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은 이달부터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전 기능 합동 단속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임행택기자

광주시교육청 ‘교복 담합업체 계약해지’ 검토

전국교육감협 공동대응도 검토

광주지역 교복 납품업체가 ‘교복 값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교육청이 계약 해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동 전수조사·대체마련을 요구하는 안건 제출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광주경찰청 수사를 통해 지역 교복 업체들의 담합행위 실체가 파악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기타 안건으로 제출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교복 담합은 광주 외 타지역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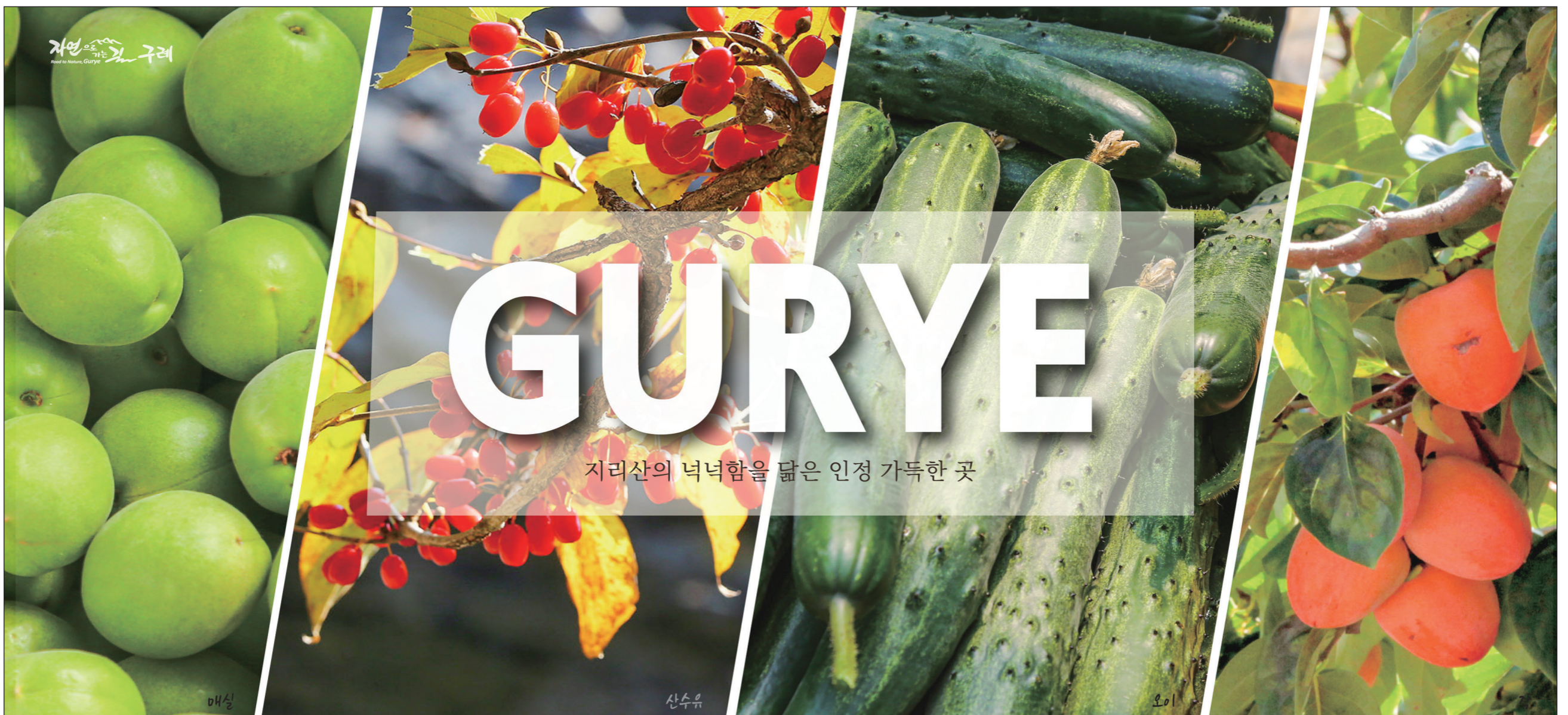
의심사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또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을 살펴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교복납품업체 운영자 대부분이 담합혐의로 기소돼 학생·학부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당장 교복 낙찰업체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신입생들은 최소 1년이상 교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지원한 입학지원금 30만원으로 비싼 교복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학부모와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비기자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